

더 많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급속노조가 앞장서서 싸워가겠습니다.

1 노동자를 노동자라 부르지 못하고

2024년, 유명 아이돌이 소속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제기하여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서부지청은 해당 아이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기에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아이돌과 소속사의 유명세만큼이나 사회적 관심도 높았습니다. 아이돌도 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부터,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특정 연예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노동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법 밖의 노동자가 겪은 상징적 사건으로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 점점 늘어나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

근로기준법은 장시간 노동 규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등 노동자에게 강력한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불리는 집단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작년 자영업자를 포함한 총취업자 수가 2,800만여 명인데, 그중 30% 이상이 '1인 자영업자'입니다.

그중 일부 직종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는 전체 약 870만명 중 143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대다수의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기준법

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가 늘어날수록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사회안전망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3 > 정부·여당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추진

정부와 여당은 급변하는 노동 현실을 반영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줄여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일하는 사람'을 '고용상 지위나 계약 형식에 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 등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그 권리와 국가·지자체의 책무, 사업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근로기준법상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여러 논쟁지점이 있습니다. 특히 권리와 의무만을 나열할 뿐 위반 시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점, 근로기준법은 그대로 둔 채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와 '일하는 사람'을 분리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노동자 내 층위를 나누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4 >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의 구멍은 작지 않습니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17.6%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해고 제한, 연차유급휴가, 연장노동 가산수당,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장을 쪼개어 '위장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범망을 피해가거나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등록(가짜 3.3 계약)해서 사업주의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꼼수는 강력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산업단지, 무엇이 필요한가요?

: 산업단지 정책요구, 2026년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요구합니다

산업단지 노동자의 현실

산업단지는 국내 제조업 생산과 수출의 60% 이상을 담당하는 생산, 산업 시설입니다. 전국에는 1,300개가 넘는 산업단지가 설치되어 있고, 제조업 노동자 중 절반인 200만 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단지에는 수많은 노동자가 일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은 산업단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산업단지를 누가 관리하는지, 우리가 필요한 요구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위험한 업무, 열악한 환경,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휴식과 복지는 부족하지만, 어느 곳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2026년 지방선거, 노동자의 목소리 필요

2026년 6월 3일(수)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뽑힌 지자체장은 대부분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관리·감독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사장이 해결할 수 없는 산업단지 환경, 안전, 복지의 요구를 지자체에는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업단지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지자체가 산업단지 문제를 논의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 노동자의 정책 요구 서명운동

민주노총, 금속노조, 화섬식품노조는 '2026년 산업단지 정책요구 서명운동'을

통해 산업단지 노동자의 요구를 지자체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 산업단지 노동자의 요구를 바탕으로, 새로 구성된 지자체와 관련 논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가 ‘2026년 산업단지 정책요구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노동자들의 힘을 키워 갑시다.

우리가 요구하는 산업단지 정책요구

산업단지 정책에 산업단지 노동자 참여 보장!
작은 사업장이라고 권리마저 작을 수는 없습니다!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자 참여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
‘천원의 아침밥’·무료 작업복 세탁소·공동 휴게실 설치!

산업단지 정책요구 서명운동 개요

누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화학섬유식품노조가 공동진행

언제: 4월 1일(수) ~ 4월 30일(목), 한 달간 진행

어떻게: QR코드 온라인 서명 및 전국 각지에서 오프라인 서명 운동 전개

이후: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정책질의, 이후 구성된 지방정부와 관련 논의를 추진

함께 합시다!
QR코드 온라인 서명운동



누구나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지엄부품물류지회

Q 금속노조에 가입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강제 잔업, 근속 미인정, 상여금 폐지, 연월차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 등 현장에는 오랫동안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져 왔습니다. 또한 같은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정규직과 상대적인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인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느꼈고, 노동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야 바꿀 수 있다고 판단해 금속노조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Q 노동조합 하면서 사업장은 어떻게 개선되었고, 조합원들은 어떤 변화를 겪었나요?

A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사업장에는 분명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사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강제 잔업 문제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던 연월차 문제도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여름이면 선풍기 하나로 버티던 작업환경에 실링팬(천장형 선풍기)이 설치되는 등 작은 것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조합원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부당한 일이 있으면 더 이상 참고 넘기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폐업 및 해고에 맞서 어떻게 견딜 수 있었나요?

A 저희는 25년 7월 5일 노동조합을 설립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1월 28일 전 조합원 집단해고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빠르게 상황이 변하면서 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를 비롯한 상급단체에서 모든 일을 제쳐두고 한걸음에 달려와 주었습니다. 조합에 대해 잘 몰랐던 조합원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자기 사업장도 아닌데 우리보다 더 열심히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사업장에서 함께 버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조합원들 사이에 생기



면서 단결력이 더 강해졌습니다. 저희는 한때 ‘고립되면 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작은 신생 지회인 저희에게도 끊임없는 관심과 연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금속노조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저희 회사는 200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동안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과 시도가 네 번이나 있었지만, 실제 설립은 2025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노동조합이 낯설고 반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은 금속노조에 대한 사회적 반감 중 상당 부분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이라는 점입니다. ‘강성’이라는 이미지를 씌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금속노조는 따뜻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노동조합입니다. 자기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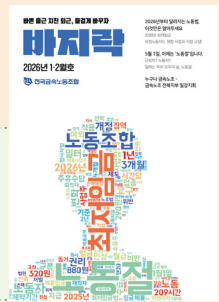
하지만 아무리 좋은 조직이 있어도, 본인이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저희도 ‘누군가가 해주겠지’ 하고 기다린 시간이 22년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조금만 더 빨리 시작했더라면 더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었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꼭 근속이 오래되었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만들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회는 설립 당시 전 직원의 95% 이상이 가입했습니다.

여러분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문제는 결코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말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조금의 용기만 있다면, 노동자들은 정말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더욱
스마트하게 쓰는 법

QR코드를스마트폰 카메라로 찰칵!



공단노동자신문 <바지락> 지난 호 보기 QR

꿀팁. <바지락>을 모바일로 볼 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면 유익한 실전 노동법과 다양한 정보,
지난 내용이 궁금하다면, 찰칵!



민주노총 노동상담페이지 QR

전국 어디서나 무료 노동상담 전화 1811-9509
온라인으로 노동 상담받고 싶다면? 찰칵! 누구나 쉽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없는 노동자라면? QR

노조없는 노동자를 위한 꿀팁이 가득

나와 우리의 일터를 바꾸고, 삶과 미래를 바꾸는 가장 큰 힘, 노동조합

무료 노동·법률상담, 가입문의 1811-9509

산재 제로! 중대재해 근절! 안전한 일터는 노조가입부터

이재명 정부는 산재사고 사망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겠다며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과 달리 현실은 아주 다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 무죄 판결이 나왔으며, 끊이지 않는 산재 사망사고, ‘대전 안전공업 참사’와 같이 노동자는 여전히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정부나 사용자들에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급속노조가 전면에 나서서 투쟁으로 중대재해를 멈추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급속노조는 “노동안전보건이 무너지면 현상이 무너진다”라는 마음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급속노조 가입으로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갑시다!

최저임금 위반 · 임금체불 · 부당해고 · 직장갑질 · 산재사고
무료 노동 상담·가입 문의 1811-9509